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2008. 4.

1. 목적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등으로 하여금 선진국의 대화 및 국제기구 등을 현지방문하여 세계 우수 대학의 협력교류방안 등의 벤치마킹 및 국제기구관련 자료 수집을 통하여 출연연구기관의 글로벌화 및 선진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을 배양하고 소속 연구기관 발전 및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일정 : 2008. 4. 2~2008. 4. 12(9박 11일)

3. 참가자(총24인)

가. 연구회(3) : 권만혁 경영지원실장, 예산팀 조원우, 평가팀 김여진
나. 연구기관(21인) :

전대관(파학기술통계연구원), 박순업(국토연구원),
이우철(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미영(산업연구원),
김지연(에너지경제연구원), 이진주(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태원(통일연구원), 임승호(한국교육개발원),
정영숙(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우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상성(농촌정보문화센터), 박종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장숙(한국여성개발원), 김철조(육아정책개발센터),
김석운(한국조세연구원), 조선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익재(한국청소년개발원), 한창동(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길수(한국행정연구원), 전태운(한국형사정책연구원),
문준영(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4. 세부프로그램

구분	일시	세부일정
제1일	4. 2.(수)	한국 → 프랑스(파리)
제2일	4. 3.(목)	프랑스(파리)
제3일	4. 4.(금)	
제4일	4. 5.(토)	프랑스(파리) → 독일(베를린)
제5일	4. 6.(일)	독일(베를린)
제6일	4. 7.(월)	
제7일	4. 8.(화)	
제8일	4. 9.(수)	스위스(제네바) → 이탈리아(로마)
제9일	4.10.(목)	이탈리아(로마)
제10일	4.11.(금)	
제11일	4.12.(토)	

5. 우수직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 별도 첨부

<첨부> 우수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붙.

<첨부>

우수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I. 연수 개요

□ 국제기구 및 세계 유수 대학의 운영체제 시찰을 목적으로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본 시찰단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음.

□ OECD(파리)에서는 OECD의 개요, 역사, 기능, 주요활동, 조직, 최근 이슈 및 OECD와 한국간 협력 등의 설명을 통하여 OECD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으며,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국제교류예산 및 사업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 및 자국의 우수인력들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가능성을 타진하였음.

□ 베를린 자유대학은 2005년 한국학 학사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독일 유수의 종합대학으로 대학의 연구활동 현황 및 전세계 150개 이상의 대학 및 연구소와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과의 교류(현재 서운대 등 7개, 통일연구원)협력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출연연구기관이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국제연합 유럽본부에 대해서는 UN의 개괄적인 현황을 중심으로 브리핑,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UN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이후 한국의 위상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대해서는 FAO의 기능, 조직 등 일반현황을 중심으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세계식량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국내 출연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동협력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음.

II. 연수기관별 성과

1. OECD

가. 연수 개요

(1) 방문일시 및 장소

- 2008.4.3(목) 15:00~17:00, OECD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

(2) 면담자

- OECD 홍보담당 Linda Aidan

- OECD 사무국 Project Manager 최원덕

- 행정자치부 휴직(서기관) 후 OECD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

(3) 면담내용

- OECD 개요, 역사, 기능, 주요활동, 조직, 최근 논의 등 설명(Linda Aidan)

- 설명내용은 아래에 정리

- OECD와 한국 간 협력 등 부연 설명(최원덕)

- OECD와 협력업체는 프랑스 노동조합, 컨설팅사, 민간 경제사회기관 등이며, 주로 경제분야의 협력관계 유지

- 또한 70여 협력국가와 공동적 문제를 찾아 협력 및 개발방안 모색

- 최근 OECD는 중국, 러시아, 인도 3개국의 회원국 참여문제와 아울러 회원국 확대와 관련하여 관심이 증대

- OECD는 IBRD, IMF 등 국제기구와 비교하여 연구조직과 기능에 있어 강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하다는 약점

- 회원국 GDP 비율에 의하여 분담금이 결정되고 미국 24%를 포함하여 미국과 일본이 50%에 근접하는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음. 한국은 회원국 중 GDP 규모로 7위에 해당되며 총 분담금 중 2.5% 부담

- 2,300명의 직원 중 한국의 정규직원은 5명도 되지 않아, 우리의 경제규모와 분담금 비율에 맞도록 유능한 인력이 OECD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회원국의 의무사항인 통계생산 및 제출과 관련하여 여러 부문의 통계 중 고

육통계는 한국이 2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결과

- 최근 국제교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

- 한국정부는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국제교류예산 및 사업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

- OECD는 직원에게 국제공무원으로서 휴가(연 30일), 병가 및 출퇴근의 완전 자유, 자녀학비, 의료보장(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 인센티브시스템, 출장비의 완전보장 등으로 우수한 근무환경 제공

- 노동강도가 세고 영어로 소통하고 글을 쓰는 부담은 있으나, 한국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국제기구

나. 연수 결과

(1) OECD 현황

□ OECD의 설립목적

- 회원국의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와 다년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

- 경제사회부문별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대 가치 창출

□ OECD의 성격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상호 경제조정 및 경제협력을 통해 회원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협력기구

- 즉,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양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경제사회정책 협의체

□ OECD의 주요 기능

- OECD는 협정문 제3조 및 제5조에서 소기의 목적 달성과 활동 계획 수행을 위한 기능을 크게 4가지로 규정

① 정보교환 및 제공

- 회원국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OECD 활동과 과제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② 정책 협의 및 연구

- WTO 또는 IMF 연차회의에 앞선 협의의 전 단계로 회원국 간 의견교환 및 협의를 진행하고, 가능한 경우 공동 해결책 및 전략을 수립

- 보다 심층적인 경제 사회정책의 효과분석이 요구되는 문제에 관해 사무국의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조사작업을 수행케 하여, 관련 위원회 사무총장 및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그 중 일부를 공개 발간

③ 권고·지침 등 공동 규범의 마련

- 주요 사항에 대한 OECD 이사회의 합의를 통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지침 및 의사향 등 마련

④ 협력 및 공동 조치

- 주요 사항에 대한 OECD 이사회의 합의를 통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지침 및 의사향을 공표하고 시행

-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정책검토(review)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여타 국의 경험 제공

□ OECD의 역사

가) OEEC 설립(1948.4)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 경제부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부 유럽 국가에 대해 마샬플랜에 의한 원조를 실시하고 효율적 원조를 위하여 OEEC(유럽경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설립

○ OEEC는 생산의 증가, 생산설비의 현대화, 무역의 자유화, 화폐의 태환성, 그리고 화폐가치 안정을 공동의 과제로 삼아 경제적 측면에서의 집단안보 체계 기능 수행

○ 군사적 측면의 집단안보체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서양 동맹(Atlantic Alliance)의 양대 지주 형성

나) OECD 설립(1961.9)

○ OEEC 설립 이래 미국과 유럽 간의 협조 여건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OEEC 개편 필요성 대두

○ 미국, 캐나다, EEC 및 EFTA 회원국, 그리고 OEEC의 기존회원국인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등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 협정에 서명(1960. 12, 1961.9. 협정문 발효)

○ OEEC가 서구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서방세계의 경제 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OEEC가 서구 17개국만을 회원국으로 한데 비해 OECD는 유럽국가 이외의 미국,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을 회원국으로 포함

다) OECD로의 확대개편 이후 협력

○ 일본(1964), 핀란드(1969), 호주(1971) 및 뉴질랜드(1973)의 추가 가입

- 1990년대 초까지 24개 회원국으로 구성

○ 1990년대에 비 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대화 확대

- 아시아와 중남미의 중진국들 및 구소련권의 영향력 하에 있는 비회원국들과 각종 정책지원프로그램(outreach programme) 추진

○ 1998년 CCN(비회원국협력위원회, Committee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 및 이를 지원하는 CCNM(비회원국협력센터, Center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를 설치하여 정책 대화 총괄

○ 멕시코(1994.5), 체코(1995.12), 헝가리(1996.5), 폴란드(1996.11), 한국(1996.12) 및 슬로바키아(2000.12)등 6개국 추가 가입

- 현재 회원국은 총 30개국이며, 5개국의 가입 검토 중

- 유럽공동체(현 EU)가 투표권이 없는 회원으로 참여

□ OECD의 조직 및 예산

■ 조직

○ 회원국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책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는 사무국 전문가들의 연구 및 행정상의 지원을 받으며 수시로 정책대화를 위한 회의를 소집해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된 정책방향의 모색 및 추진

○ 의사결정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Council)가 있고, 이사회는 30개 회원국 대표 간의 전원합의제(consensus)로 운영

- 개별 회원국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있을 수 없음.

- 단, 명분이 없는 주장 혹은 반대는 "동료들의 압력(peer pressure)" 으로 인해 정책대화기구로서의 분위기가 유지하기 어려움.

○ 각료이사회: 연 1회 개최, 국별로 재정장관, 외무장관 및 통산장관 중 1~2인 참석

○ 상주대표이사회: 월 2회 개최, OECD 주재 각국대표부 대사가 참석

○ 집행위원회, 예산위원회, 인사정책위원회 및 홍보작업반: 행정기술적 사항 심의

○ 특별집행위원회(ECCS): 연 2회 개최. 각 회원국 고위대표가 참석. 각료이사회 차원 관심사항의 종합점검기능 수행

○ 비회원국협력위원회(CCN), 개발원조위(DAC), 개발연구소(Development Centre), 자문이사회, 조선작업반, 미래연구프로그램

○ 자문기구[유럽협의회(Council of Europe),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 및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UAC)]들과의 각 연락위원회 등

○ 정책부문별 정부간 공동연구 및 정책대화를 추진·집행하는 사업집행기구로서 23개의 위원회

○ 사무국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사업을 행정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하부 집행기구

-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4인의 지휘·감독하에 2,300여명의 직원 근무

- 사무국은 어디까지나 결정사항의 집행부서로서 회원국 정부에 대해 하위구조

■ 정책사업 추진방식

○ 이사회의 방향제시 및 승인 하에 위원회별로 사업프로그램(work programme) 채택 및 운영

○ 각종 사업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

- 국제경제문제 대처

• 세계경기변동, 국제금융, 국제무역, 국제투자, 다국적기업, 조세경쟁, 전 자상거래, 에너지, 기후변화 등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경제문제에 관한 장단기동향 점검, 공동과제의 파악 및 회원국간 공동보조와 정책조정 추진

- 회원국경제운영 상호지원

• 실업, 고령화, 교육, 농업, 규제개혁, 기업지배구조, 정부개혁, 지역개발 등 회원국 공통의 문제점에 대해 각국 경험의 비교검토, 모범적 대응사례(best-practice)의 발굴, 공동의 정책지침(guideline) 혹은 정책권고(recommendation)를 도출

- 비회원국 경제 발전 지원

• 러시아·중국·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 등 Big 5, 체제전환기경제, 발칸 동 분쟁종결지역, 최빈국들, 금융위기 취약국들 등의 경제개혁 및 경제발전을 유도하고 지도하기 위한 비회원국들과의 각종 정책대화 및 관련 회원국 정책의 조정

■ 예산

○ 2008년 OECD 예산은 3억3천6백만 유로

- 회원국별 배분금액으로 충당

- 1개 국가가 분담금액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재 미국과 일본의 예산 배분비율이 50%에 근접

○ 사업예산

- Part I 사업예산: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 Part II 사업예산: 회원국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 연금예산: 사무국 직원의 연금지급을 위한 예산

(2) OECD의 활동상과 및 최근 논의동향

□ OECD의 특징

○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선진 각국의 모임

- WTO(세계무역기구)와 UNCTAD(UN무역개발회의)등의 국제기구에 있어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경우, OECD가 그 조정을 위한 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정치, 군사를 제외하고 경제, 사회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거시경제, 무역, 산업, 농업, 원조, 에너지, 노동, 복지, 과학기술, 교육 등)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각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 대처할 능력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
- 활동형태는 WTO와 같은 회원국간의 □□협장□□이 아니라 □□논의□□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토의와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인식을 조성하고 각 국의 정책 조화를 도모

- 이와 같은 성격을 반영하여 기구로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여 회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 며, 회의의 절차 규칙은 정해져 있지만 의사운영은 매우 유연하며 표결도 이루어지지 않음.

- OECD 회의는 반드시 일정 결론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실제로 각 국 간에 공통인식을 조성하여 상호협력과 협조에 의한 정책 조화로 연결

○ OECD는 경제·사회의 광범위한 제반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밀도 높은 토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간 총 3,000여건에 달하는 각종 회의성과(그 대부분은 OECD에서 출판물로서 공포)는 각 분야에서 높이 평가

□ OECD의 주요 활동

- OECD의 주요 활동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

- 각 회원국의 상호 관심사인 중요 경제·사회의제와 관련하여 토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으로서 필요한 경우 조언이나 권고
- 다변적·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중요사안에 대하여 OECD 회원국 간의 사전 상호 의견이나 정보교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

- 그 대표적 예가 UR 타결을 위한 노력이나 WTO내에서 논의되는 환경, 노동 및 경쟁정책 등

- 회원국 간 거래에 있어서 상호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경제문제와 관련하여 규범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

- OECD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OECD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는 규범의 성격을 갖는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협정(Agreement) 등이 있으며,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약정(Arrangement), 지침(Guideline) 등은 규범은 아니며 단지 도

덕적, 정치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내포

- 다른 국제 전문가구와는 달리 OECD의 관심사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며 여건의 변화에 따라 폭넓게 그리고 유연하게 확대

- 초기 논의의 대상은 주로 거시정책의 협의·조정, 재화·서비스거래의 자유화 및 외국인 투자촉진 등에 국한

- 그 후 대상영역은 산업구조조정, 추진, 개발원조의 증대, 에너지정책, 환경 보호, 첨단기술개발, 경쟁정책의 조정, 소비자보호, 노동보호 등으로 확대

□ OECD의 주요 활동성과

- 회원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에 입각한 활동(예: 통화·산업·거시경제정책협의 및 조정)과 OECD 회원국간 입장조정을 위한 활동(예: UNCTAD와 관련한 대개도국관계, OPEC 산유국과의 관계조정), 세계경제체제 개선을 위한 GSP 제도의 채택, IAEA에서의 원자력 책임에 대해 환경채택 유도,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투자확대, 수출신용지침 제정, 다국적 기업활동의 규제, 국제투자규범 마련 등의 선도적 역할

- OECD의 활동은 경제 무역 환경 등 24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170개의 규범(Acts)을 채택하였고, 매년 약 300종, 6만 페이지 이상의 경제전망 및 연구 보고서 발간

- OECD는 주요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협의를 통해 회원국간 정책을 조정하고 공동규범 제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규범(Acts)을 마련함으로써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전인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세계경제 성장에도 기여

-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원칙 등 OECD 회원국 간에 채택된 정책과 규범이 사실상 세계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OECD가 전후 세계경제를 상당부분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음

□ OECD의 최근 논의 동향

-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며 경제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더욱 중시되고, 특히 거시경제정책의 조정, 무역과 투자의 증대 및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조

- 통화금융, 조세제도, 투자제도, 경쟁정책, 부패대책, 환경정책, 노동정책 등 제반 국내정책이 주요 국제문제에 모두

- 자본과 인력의 국제적 이동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증대,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문제점들, 국내·국제적 빈부격차의 확대 등 글로벌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대두
-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 등 새로운 기술이 글로벌화와 상호작용하며 급속히 발전하고 보급되면서 이들 신기술에 내재한 혜택을 향유하고 동시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 등의 위험요소(risk)들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의 필요성 절실
- 디지털 격차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악화 가능성, 유전자변형체(GMO)가 환경 및 인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 등 우려
- 아시아를 위시한 신흥시장 경제권을 강타했던 금융위기와 같이 선진경제들만의 안정과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현 국제금융구조로는 세계적 금융위기의 재발을 예방이 곤란하다는 우려
- 지속적 경제발전의 궁극적 기반은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이 경제발전의 핵심과제로 인식되며, 민주주의 의식의 확산, 정보소통 가속화, NGO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각국 정부 및 정부간 국제기구의 정당성(legitimacy)이 약화되고 그 결과 제반정책의 수립과 집행방식의 혁신 요구

다. 시사점

- 아시아 지역 두 회원국의 하나로서 한국은 OECD와 비회원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여도와 리더십을 제고할 필요
- 아시아경제의 성장 발전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OECD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과 세계경제에의 영향력 강화를 반영하여 한국 내에 운영하던 OECD 지역센터 4곳을 ‘OECD 서울센터’로 통합 출범시키는 등 OECD는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
- 한국은 OECD의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 지역에서의 기여도와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필요
 - 비회원국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한국의 정책경험을 제공하여 경제사회정책의 허브로 역할
 - OECD 기준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경제사회지표 및 동계를 생산하고 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하며, OECD의 활동과 성과를 국내 및 아시아 지역

에 전파

- 전문가회의, 워크숍,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OECD와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
-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OECD 분담금을 부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국가 위상 강화 및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
 - 회원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권리 수행
 - 유능한 공무원 등 고급인력의 국제기구 근무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
- 정부출연기관은 OECD와의 공동연구 및 연구성과의 신속한 보급 등을 통하여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정책의 업그레이드를 모색할 필요

2. 베를린 자유대학(Freie Universitt)

가. 연수 개요

(1) 방문일시 : 2008년 4월 7일(월) 10:00~12:30

(2) 면 담 자

- 베를린 자유대학 Holmer Brochlos 한국학과장
- 베를린 자유대학 허준영 강사(june0331@empal.com)

(3) 면담내용 : 베를린 자유대학의 개황, 조직, 국제협력 등 자료 수집

나. 연수 결과

(1) 기관 개황

□ 개요

- o 구분 : 공립대학 (개교연도 : 1948년)
- o 소재지 : 독일 베를린
- o 교수 1인당 학생수 : 50여 명
- o 전임교원수 : 806명
- o 학생수 : 3만 4000여 명 (외국인학생비율 10%)
- o 장서량 : 약 800만 권
- o Professors (Full-time) and Junior Professors: 462 incl. 61 Junior Professors
- o Departments and Central Institutes: 15 (incl. Medicine)
- o 학과: 100여개
- o Graduate Schools: 16
- o 공동연구센터: 21, incl. Medicine (Status: 2007)
- o 정부지원: 290 million euros p. a.
- o 외부자본: 59 million euros p. a.

베를린 자유대학은 전세계 150개 이상의 대학 및 연구소와 관계를 맺고 교환학생프로그램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학교 기숙사는 약 1만 4000실 규모로

학생은 기숙사 신청 후 1학기에서 4학기 정도 기다려야 얻을 수 있다. 캠퍼스는 도시의 전 지역에 산재해 있으나 대부분의 건물이 베를린 남부인 달렘(Dahlem)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 설립배경

1948년 진리, 정의 및 자유라는 건학이념에 따라 꿈을 상징으로 하여 훔볼트 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이 서베를린에 설립한 대학교이다. 본래 베를린대학교는 1810년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에서 K.W.훔볼트, J.G.피히테, F.E.슐라이어마허 등이 철학연구를 핵심으로 하는 학문의 종합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세웠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베를린이 동서로 나뉘게 되자 동베를린에 있던 베를린대학교가 동부 독일에 귀속되어 훔볼트대학으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상의 통제와 학생운동에 대한 억압 때문에 격렬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1947년 봄부터 1948년 봄에 걸쳐 이 운동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해 1948년 서부 베를린의 민주적 의사와 체제를 상징하는 대학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 대학교는 독일·미국 우호관계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1960년대 말 독일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의 진원지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그후 비판적 성향을 가진 대학으로 인식되었다. 뮌헨대학교와 함께 독일에서 제일 큰 대학교이다.

□ 연구 인력 및 수행 프로젝트 현황

자유대는 명실상부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발전을 거듭해 현재 45,000여 명의 재학생과 90여 개의 학과를 가진 독일의 대규모 종합대학 중 하나로 발전했으며, 해마다 약 4,000명의 졸업생과 1,000여 명의 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총 530여 명의 교수와 8,000여 명의 교직원인 자유대에서 연구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자유대는 연구비 수혜에 있어 뛰어난 업적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연구공동체(DFG)가 지급하는 연구비를 독일 전체 대학 중 다섯 번째로 많이 받고 있으며, DFG를 비롯해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여러 기관, 기업들로부터 1년에 약 1억 2천만 마르크의 연구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연구비 수혜 규모에서 독일 대학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약 250여 개의 연구프로젝트가 외부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자체 예산으로 약 30여 개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자유대가 주도하는 "달렘 회의(Dahlem-Konferenz)"는 의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매우 권위 있는 학술회의로 인정받고 있다.

□ 대학구성 및 부설기관

가) 대학구성

의과대학, 법과대학, 경제대학, 교육대학, 철학·사회과학대학, 물리대학 등 12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위과정은 디플롬(Diplom), 마기스터(Magister), 국가시험 및 박사학위로 편성되어 80개 이상의 학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최근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의학, 자연과학, 철학, 사회과학 분야에 학생 수가 가장 많다.

- o Biology, Chemistry, Pharmacy
- o Business and Economics
- o Earth Sciences
- o Educational Science and Psychology
- o History and Cultural Sciences
- o Law
- o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 o Medicine (Charité – University Medicine Berlin is a joint corporation of Freie Universität and Humboldt-Universität)
- o Philosophy and Humanities
- o Physics
- o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 o Veterinary Medicine

나) 부설기관

주요부설기관으로는 식물원·데르리에이션센터·어학센터 등이 있으며, 부설연구소로 존에프케네디 북미연구소(John F. Kennedy Institute for North American Studies), 라틴아메리카연구소(Institute for Latin American Studies), 동유럽연구소(Institute for Eastern European Studies) 등이 있다.

□ 국제협력과 파트너십

베를린 자유대는 독일의 주요 대학 중 하나로, 연구 및 교육에 있어 타 대학 및 기관들과 폭넓은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 1950년대부터 서유럽의 대학들은 물론 Stanford, Princeton, Columbia 등 미국의 선도대학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오고 있다. 이어서 1960년대는 공산권 국가의 대학과 관계를 찾기 시작했는데 모스크바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이데올로기화되었던 레닌그라드대학과, 1970년대에는 독일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의 북경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동유럽 대학들과는 1970년대에 첫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에는 북미, 동유럽, 동아시아의 여러 학회나 협회 등과도 연계를 확장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한국 및 일본 대학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한국의 대학으로는 한국외국어대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베를린 자유대에는 한국학과를 2005년 가을 학사과정으로 개설·운영하여 독일 내 한국학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도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전공학생은 매 학년 10명 정도이며 부전공학생도 100명 정도 된다. 한국 실습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 현재 연세대와 고려대에 각각 2명의 교환학생이 있다.

대학 간의 교류는 학술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교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자유대는 연간 약 2천여 명의 외국학자들을 초청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10%가 넘는 5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고 있다.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 수는 세계적으로 130개가 넘는다.

<한국과의 교류협력 현황>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포항공대
한국의국어대학교
통일연구원(KINU)

□ 연구활동

베를린 자유대의 연구는 다양한 과학적 네트워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연구 포커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추진하며 미래의 연구 트렌드를 구축하고 있다. 자유대는 지식의 확산을 장려하며 젊은 연구자들에게 보다 높은 교

육을 제공하고 있다.

가) 과학적 네트워크

일반 사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그리고 외부 연구소와 협력 강화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연구소로서 대학의 위상은 물론 베를린 자유대에서 수행되는 기초과학, 응용과학, 계약 연구가 강화되고 확대되었다.

나) 연구클러스터

2003년 이후로 베를린 자유대는 다양한 연구유형을 구성하는데 학제적인 클러스터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목적은 세계적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화적 트렌드를 규정하고 관련 연구분야를 개발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관련 이슈들의 해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학문적인 연구분야에서부터 개별 부문과 연구컨텐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다) 지식 이전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지식과 기술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불어, 베를린 자유대는 개별 산업에 의한 혁신적인 연구 결과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졸업생 및 연구자에 의한 벤처사업의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의 연구성과의 우수성은 대학 순위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DFG(독일연구공동체)투자 순위, 고등 교육 세계 대학 순위 및 CHE 연구 순위를 포함한다. 대학 연구 성과의 우수성은 과거 수년 외부 자금의 지속적 증가와 베를린 자유대의 학자들은 저명한 학자에게 주는 라이프니츠(Leibniz)상을 수상하였다.

□ 연구유형

다양한 연구기관과 학회에서 수행되는 개별 연구프로젝트와 더불어, 베를린 자유대는 광범위한 초학문적이고 국제적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연구협력은 공동연구센터, 연구부서, 실행프로그램 등, 그리고 베를린 자유대 자체를 통해 지원되는 독일연구기금에 의해 시행되었다. 과거 몇 년동안 베를린 자유대는 다양한 범학문적 연구센터와 연구기관들 그리고 광범위한 연구스펙트럼을 통한 연구협력을 설립했다.

가) DFG Programs

- o DFG Research Center
- o Collaborative Research Centers
- o Research Training Centers
- o Research Units
- o Priority Programmes

나) Initiative for Excellence Competition: Cluster

- o Topoi -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Space and Knowledge in Ancient Civilizations
- o Languages of Emotion
- o NeuroCure - Towards a Better Outcome of Neurological Disorders

다) Main Fields of Research and Cooperation Partners

- o Interdisciplinary Centers
 - o Dahlem Humanities Center
 - o Research Projects in the Departments (see "Further Fields of Activity in the Department")
 - o Cooperations with EU
 - o Cooperations with BMBF
 - o Cooperations with extramural research institutions
 - o Cooperations with industrial institutions
 - o Associated Institutes and Foundations at the Freie Universität
 - o Junior Research Groups
 - o Postgraduate Schools and Graduate Schools
 - o Extraordinary Professorships
 - o Professorships of Foundations and Extraordinary Programs
- #### 라) Winners of Scientific Awards
- o Winners of the Leibniz Prize since 1988
 - o Winners of the Max Planck Research Prize since 1990

마) Online Data Banks

- o Research Data Bank

- o FU Publications / University Bibliography
- o Experts Service of the Press Office

□ 연구와 기술 교류

베를린 자유대는 워크숍, 전시회, 및 학술회의에서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 대중에게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다. 게다가 베를린 자유대는 사기업 및 협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 o profund - Consulting of Company Founding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 o Spin offs
- o Parent and Licence Service
- o Participation of Freie Universität at Fairs
- Fairs (2002~2008)
- o Scientific Exhibitions and Events
- Lange Nacht der Wissenschaften an der Freien Universität (Long Night of Sciences)
- KinderUni (University for Children)
- Dahlemer Konferenzen

베를린 자유대는 연구와 교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대학과 기업들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베를린 자유대는 매년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수에 기여하는 약 600명의 방문연구원과 121개의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다

4. 시사점

- o 베를린 자유대는 한국을 비롯해 수많은 대학 및 기업들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수는 세계적으로 130개가 넘으며,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지식과 기술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불어, 개별 산업에 의한 혁신적인 연구 결과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졸업생 및 연구자에 의한 벤처사업의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 o 대학간의 교류는 학술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교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자유대는 연간 약 2천여 명의 외국학자들을 초청하고 있으며,

전체 재학생의 10%가 넘는 5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고 있다.

- o 2003년 이후로 베를린 자유대는 다양한 연구유형을 구성하는데 학제적인 클러스터 전략을 추구하였으며, 연구협력은 공동연구센터, 연구부서, 신행프로그램 등, 그리고 베를린 자유대 자체를 통해 지원되는 독일연구기금에 의해 시행되었다.

- o 통계보다 자원에 의한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정부, 기업, 대학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독일의 연구환경을 통해 국내 대학 및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환경을 재검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으며 파트너십, 인턴 등 현재 요구되고 있는 교류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o 베를린 자유대에는 한국학과를 2005년 가을 학사과정으로 개설·운영하여 독일 내 한국학 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8년도 첫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원이 적어 일본학과나 중국학과에 비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이다. 한국의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으로서는 한국학과와 빠른 정착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UN 유럽본부

가. 연수 개요

(1) 방문일시 및 장소

o 2008. 4. 9(수) 11:30 ~ 12:30, UN 유럽 본부(스위스 제네바 소재)

(2) 면담자

o UN 홍보담당 Ms. Gessie Bellverie

o 통역원 : 조문행

(3) 면담내용 : UN 개요, 역사, 기능, 주요활동, 조직, 최근 현안 등 자료 수집

나. 연수 결과

(1) 국제연합의意義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UN).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 주요기구와 전문기구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연도는 1945년 10월24일이며,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력을 증진함이다.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현재 가입 국가는 2006년 현재 192개국으로 본부소재지는 미국 뉴욕이다.

□ 국제연합의 성립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은 전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국제연맹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일반적이고 새로운 범세계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구상을 하였다.

1941년 8월 14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은 대서양연장을 통해 종전 후 새로운 세계평화의 정책을 회담하였으며, 1942년 1월 1일에는 추축국에 대항하여 싸웠던 26개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연합국선언(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에 서명하였다.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미국·영국·중국·소련 4개국은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합의한 후, 1944년 8~10월까지 워싱턴 교외에서 열린 덤바턴오크스회의에서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여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및 구성 등에 합의하였으며, 전문 12장의 국제연합헌장 초안을 마련하였다.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포괄방식 등 미결사항이 모두 타결되고, 1945년 4월 25일 50개국 대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 '국제기구에 대한 연합국회의'를 개최하고, 그해 6월 25일에 '국제연합헌장을 채택하였으며, 다음날 51개국이 서명하였다. 그해 10월 24일 서명국의 과반수가 비준하였다.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이 발효된 10월 24일을 'UN Day & QUOT로 정하고, 세계 각국이 기념일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다.

□ 국제연합의 목적

국제연합의 목적이 반영된 국제연합헌장은 전문과 19장 11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러시아어·중국어·프랑스어·에스파냐어·의 5개 언어로 표기되어 있다.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서 밝히듯이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있다. 또 국가간 신린관계를 유지시키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피하며,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7가지 활동원칙이 제2조에 있다. 즉,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모든 회원국의 헌정의무 준수,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서 무력행사 금지, 국제연합의 행동에 대한 지원 및 국제연합의 제재 대상국에 대한 불협조, 비회원국에 장기 원칙에 입각한 행동 촉구, 국내문제 불간섭 등이다.

□ 국제연합의 재정

국제연합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 특별기부금, 기타 사업수익으로 충당된다. 각국의 분담금 비율은 총회 산하의 분담금위원회에서 각국의 지불능력에 수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1973년 제28차 총회에서 어떤 국가도 국제연합 연간예산액의 25% 이상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선과 어떤 국가도 0.02%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한선을 정하였다.

국제연합 정규사업 예산은 2년마다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사무총장이 제출하고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예산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국제연합 예산의 사업적 성격은 34개국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정규사업 예산은 18개국으로 구성된 기여금위원회가 정한 대로 회원국이 납부

하는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그런데 국제연합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특별계획과 전문기구 운영, 평화유지 활동기금 등으로 지출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많은 회원국이 정규예산 분담금과 PKO 예산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더욱이 1955년 이후 가입한 신규 회원국들은 제개발국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연합의 재정적 원조가 필요한 국가도 많다.

□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총회를 비롯하여 사무국·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재판소의 6개 주요 기구와 그 산하에 많은 보조기구와 16개 전문기구가 있다. [총회(General Assembly)]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연합의 최고기관이다. 각국은 5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지만, 표결 때는 1국 1표가 원칙이다. 중요 안전은 투표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일반안전과 절차 문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다. 미국·영국·러시아·연합·중국·프랑스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권평등에 기초한 1국 1표주의의 원리에 위배되지만,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상 인정된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세계법원'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국제연맹 때 설치된 PCIJ(상설사법재판소)의 후신으로, 국제연합헌장과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을 두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활동한다.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제연합본부에서 떨어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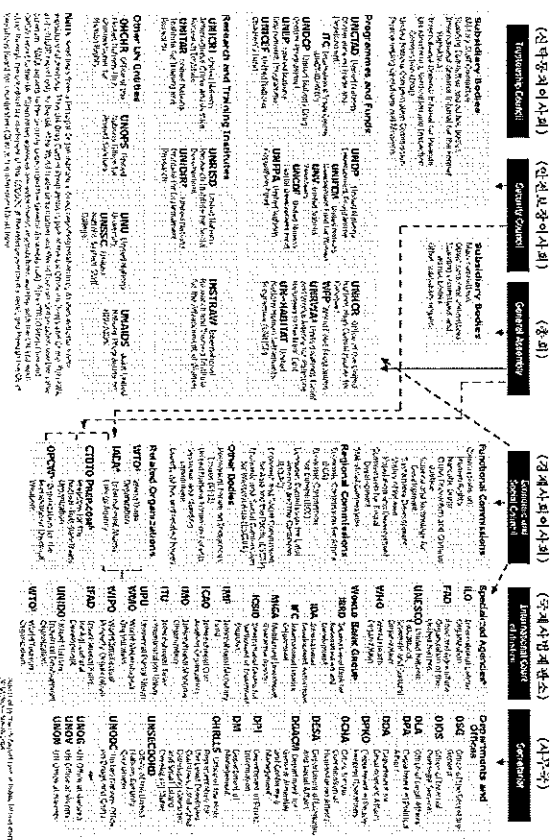
사무국(Secretariat) 국제연합의 상설 사무기관으로, 평화유지군의 편성과 지휘 외에 국제문제의 사실조사와 조정활동 등을 한다.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34명, 직원 1만 9,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되며, 관례적으로 중립국 인물이 선출된다. 임기는 헌장에 별도로 규정은 없으나 초대 사무총장의 관례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각종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각 전문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제연합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WHO(세계보건기구)·IMF(국제통화기

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IFC(국제금융공사)·IDA(국제개발협회)·ICAO(국제민간항공기구)·UPU(만국우편연합)·IMO(국제해사기구)·WMO(세계기상기구)·ITU(국제전기통신연합)·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IFAD(국제농업개발기금)·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있다.

[각종 보조기구(Subsidiary Organs)] 총회 및 이사회는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개발계획·국제연합환경계획·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PKO(평화유지활동) 등이 있다.

<UN 조직도>



□ 국제연합의 주요활동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방지하고, 국지전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한다. 헌장 규정상 평화유지활동의 1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으나, 1950년 11월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총회도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전보장에 관해 회원국들에게 집단행동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지역적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헌장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의 군사동맹이 출범하였다.

[군비축소]

1946년 국제연합 원자력위원회를 발족시켜 원자폭탄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와 군비 및 무장병력 제한에 합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52년 원자력위원회와 일반군축위원회가 군비축소위원회로 합치되었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국제원자력기구가 1957년 성립되었다. 1961년에는 핵무기의 사용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를 선언하고, 1963년에 핵실험금지조약,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을 부분적으로 체결하였으며, 1971년 핵저비핵화조약을 발효시켰다.

1999년 NATO와 유고의 군사기습협정의 체결로 정부군의 코소보 철수를 시작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코소보 평화계획을 승인하고 참정동치를 결정하였다.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 핵군축, 핵확산 방지, 동상무기 군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국제연합과 한국과의 관계

국제연합은 1948년 12월 12일 소련 등 6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소총회를 열고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1950년 6·25전쟁 때는 소련이 자유중국에 대포권에 항의하여 불참한 가운데 미국 주도로 신속히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주일 후 소련이 복귀하여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미국의 주도로 파병이 이루어졌다.

한국과 북한의 국제연합 가입문제는 미·소냉전과 남북한의 대결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되었으나, 1991년 9월 17일 ROK(대한민국), DP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동시 가입하였다.

1997년 대기업을 잇단 부도와 금융위기 등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 국제연합 관련 정부간 기구인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150~200억 달러 지원받았다. 1999년 10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국제연합 PKF(국제평화유지군)의 자력으로 특전사 1대대, 의료 및 공병요원 일부가 혼합 편성된 상륙수부대 419명을 파병하였다.

(2) 유엔 산하기관

□ 유엔사무국 산하

유엔사무국 평화유지활동국(DPKO)
유엔사무국 정부국(DPA)
유엔 제네바사무소(UNOG)
유엔사무국 감사실(OIOS)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유엔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ESCSWA)
유엔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A)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유엔 이라크프로그래밍사무소(OIP)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DESA)
유엔사무국 공보실(DPI)
유엔사무국 관리국(DM)
유엔사무국 인도적문제조정실(OCHA)
유엔 나이로비사무소(UNON)
유엔사무국 총회회의운영국(DGAACS)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유엔유럽경제위원회(ECE)
유엔사무국 군축국(DDA)
유엔사무국 법률실(OLA)
유엔 비엔나사무소(UNOV)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 유엔산하기구

세계식량계획(WF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인간정주위원회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유엔마약통제및범죄예방사무소(ODCCP)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CTY)
트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대학(UNTU)

국제공무원위원회(ICSC)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합동감사단(ITU)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국제무역센터(ITC)

UN System Staff College(UNSSC)

유엔직원합동연금기금(UNJSPF)

□ 유엔전문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해사기구(IMO)

세계기상기구(W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민국우편연합(UPU)

세계은행(World Bank)

□ 유엔독립기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원자력기구(IAEA)

□ 정부간기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Sierra Leone 특별재판소

국제이주기구(IOM)

세계관광기구(WTO)

국제형사법원(ICC)

국제수역기구(OIE)

바세나르체제(WA)

(3) 한국의 대 유엔외교

대 유엔외교는 남북한이 동시 가입됨으로써 종전의 소모적이며 이념적 경쟁에 치우쳐 소득없는 대결적 외교에서 보다 현실적이며 국제적인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의 산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의 외교는 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알아본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모두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 내에서 다루는 것은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해 관계가 없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많은 국가들과 4강들의 입김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유엔 내에서의 한반도 평화통일과 안정에 대한 논의와 기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지만 유엔외교의 중요성은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많은 외교적 접촉을 통한 국가 위상의 격상을 노릴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다양한 외교적 채널의 확보를 위한 장이 될 수 있으며, 유엔의 전문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노력을 어느 정도의 한반도 문제에 도움은 되어 줄 것이다.

또한 남북한에 문제에 있어서도 각자의 긴박한 대결 구도 속에서 유엔과 같은 다자간 외교 채널을 통하여 외교적인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돌발적인 상황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며 유엔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과 노력을 경주 한다면 보다 희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

(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의미와 과제

□ 반 장관의 사무총장 선출은 건국 이래 최대의 민족적 경사로, 한국외교사의 패기로 기록될 것이다. 반 총장은 아시아인으로서는 미인마의 우탄트 총장이후 무려 35년 만에 유엔 사무총장을 맡게돼 그동안 서방국가들이 중심 축을 이뤘던 유엔이란 장에서 아시아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낳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란 자리는 세계의 재창,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국의 국제위상을 높이고 외교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일각에선 지난 1988년 올림픽 개최가 한국의 경제적으로 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반 총장의 선출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한국의 역사적 도약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비교, 전망하기도 한다. 또 막판에 가서야 유력한 후보가 윤곽을 드러냈던 과거 유엔총장 선출사례와는 달리 반 총장은 일찍부터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받는 등 선두를 달리며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과거 대미 의존적 외교에서 탈피, 균형외교로 중심을 잡은 한국외교의 승리로도 꼽히고 있다. 이로써 건국과정 및 한국전쟁 등 굵직한 역사적 전기마다 유엔의 수혜를 받아왔던 한국은 유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국가로 탈바꿈, 유엔의 가장 성공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 또 반 총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 출신이어서 세계인으로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창설된 유엔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소망도 한 몸 에 받고 있다. 반 총장 선출의 의미가 이처럼 큰 만큼 반 총장이 추진해야 할 과제 또한 막중하다. 첫 번째 도전은 워니워니해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최대 위 기국면에 돌입한 북핵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 총장은 이미 외교장관으로서 북 핵문제를 오랜 기간 다뤄와 북한의 입장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의 정책 을 역대 어느 총장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조정 및 종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반 총장도 북핵문제를 3가지 최우선 역점과제 중 하나로 꼽은 뒤 "안보리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경우 신 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유엔 사무총장이란 자리는 국제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종재하고 해결하는 조 경지역이라는 점에서 반 총장이 직면한 문제는 적지 않다. 반 차기총장은 돌 파구를 찾지 못한 채 수십년간 지속돼온 중동문제를 비롯해 아프리카와 일부 아 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불안과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정착과 전후복구 사업 등 현안을 관리해야 하며 세계화 등으로 야기된 빈부격차와 인종, 종교, 지역간 갈

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이끌어야 한다.

□ 또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마약거래, 자금세탁 등 범려환 동, 지구온난화 및 만성적인 질병 등 세계평화와 세계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 소들에 대한국제적 대응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유엔 창설 당시와 달라진 새로운 국제환경에 맞는 새로운 유엔의 위상을 재 정립하는 유엔 개혁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2차대전 후 냉전체제의 출범과 함께 출범한 유엔은 구조적 및 동구권의 몰락으로 국제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발 생했지만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받아왔다. 국제적으로 유엔 안보리 개편, 유엔 총회의 권한 확대문제, 유엔 사무국의 효율성 제고 등은 반 총장이 피해야 할 수 없는 과 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 총장도 이미 유엔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성 고양, 방만한 조직의 통합에 유엔개혁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의지를 보였으니 지켜보며 지원하자.

다. 시사점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 이후 한국의 위상 변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분명히 변했다. 그러나 이는 반 총장이 위상 변화를 이끌었다기보다는 유엔사무총장 배출을 계기로 우 리 정부 스스로 변화를 위해 애쓴 면이 크다. 정부관계자는 "반 총장은 한국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직접 우리에게 도움 되는 일은 없다"면서 "다 만 반 총장 취임이후 한국의 국제적 기여라는 이슈를 스스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반 총장의 유엔사무총장 당선은 기점으로 국내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기여가 새롭게 조명됐으며, 수년간 이어졌던 유엔 분담금 체납문제가 해결됐다.

지난 해 12월 국회는 정부 원안보다 665억원이 늘어난 2965억원을 국제기구 분 담금 체납액 납부예산으로 책정하고, 2008년까지 1억 3000만달러의 체납액을 모두 해소하기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정부개발원조 (ODA)규모도 지난해 7088억원에서 올해 7279억원으로 늘렸다. 외교통상부는 ODA국까지 신설했다.

한국인의 유엔진출은 반 총장 취임이후 2008년 3월 기준으로 2007년에 비해

51명으로 20.3% 증가했다. 현재 42개 기구에 302명이 근무중이며, 외교부는 향후 10년 한국인의 유엔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중기 플랜을 마련했다.

다만 현안인 티벳, 코소보 사태 및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UN의 결의가 OECD의 권고안처럼 강제력이 없다는 것과 국제기구가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합리화 시키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4.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가. 연수 개요

(1) 방문일시 : 2008. 4. 10(목) 10:00~12:00

(2) 장 소 : FAO 본부

소재지 : Viale delle Terme di Caracalla 00100 Rome, Italy

(3) 면 담 자

o Isabel Alvarez (Director Research and Extension Division)

o Andrea Sonnino (Senior Agricultural Research Officer Research and Extension Division)

o Pyong Jae Lee (Human Resources Officer)

(4) 면담내용 : FAO의 일반현황, 주요활동, 특별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나. 연수 결과

(1) FAO 일반현황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모든 인구의 영양상태와 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촌주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945년에 설립된 UN의 산하기관으로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다.

FAO는 2008년 현재까지 192개국이 회원국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FAO는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의 UN 기구 중 최대규모인 전문기구로서 본부에 근무하는 국제공무원 3,500명과 세계각지(65여개국)의 현장 프로젝트 담당자 2,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인 정규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4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FAO의 주요 기능은 세계 각국 국민들의 영양상태 개선, 식량농업(임업,수산업 포함)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하여 개발도상국 및 식량부족국에 식량을 보급 및 조정하는 등 세계 식량 농업개발을 목표로 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FAO는 WFP(세계식량계획)와 함께 식량원조와 긴급구호활동을 수행하고 UNDP와 함께 기술원조를 확대하며 IFAD(국제농업개발기금)와 함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FAO는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개발, 장기적인 식량중산 및 식량안보의 개선에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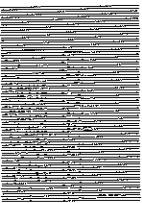
FAO는 농업개발 촉진, 영양개선, 식량안보(모든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식량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함으로써 빈곤과 기아를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이 FAO는 설립 이후 식량생산은 인구보다 두배나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1960년대 초부터 개발도상국의 기아인구비중은 50%이상에서 20% 미만으로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약 8억 명은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 수치는 북미지역과 서유럽지역의 전체 인구를 상회하는 것이다. 따라서, FAO의 역할 및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2) FAO 조직

FAO 본부는 현재 간부(D급) 및 전문직(P급) 국제공무원 1,362명과 기능직(현 지체용) 2,18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의 필드전문가까지 합하면 전체적으로 4,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3) 주요 활동

(가) 농업개발지원

광범위한 기술적 지원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 경제를 포함하는 종합적 분야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한다.

(나) 정보제공

종합정보센터로서 영양, 식량, 농업, 임업, 수산업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 보급하여 농민, 과학자, 정부 정책담당자, 비정부기구(NGO)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회원국에 대한 지원

광범위한 정보네트워크와 기술전문가의 역량 및 경험에 기초하여 FAO는 회원국의 농업정책, 기획, 개발에 필요한 지문을 제공한다.

(라) 중립적 토론의 장 제공

모든 국가들이 식량농업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정책을 토론하고 입안할 수 있는 중립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FAO는 식량농업관련 주요회의, 기술회의, 전문가협의를 주최하며,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협약 및 협정을 입안하는데 기여한다.

(4) 특별프로그램

(가) 세계정상회의의 5년후

FAO가 1996년 11월에 주최한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183개국 정상들은 2015년까지 세계 기아인구를 현재의 8억4,000만 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예측에 의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계획보다 45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FAO는 2002년 6월 '세계식량정상회의 : 5년 후'라는 후속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1개국 대표들이 모여 세계 기아인구 감축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나) 식량안보 특별프로그램

1994년에 설치된 '식량안보 특별프로그램'은 민성적 기아인구의 절대 다수가

살고있는 저소득 식량부족국(LIFDCs: low-income food-deficit countries)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량안보란 모든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식량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시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식량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면서 동시에 식량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요 지원자금 기여국은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EU로 한국은 SPFS를 통해 북한 축산개발사업과 채소생산사업에 50만 불을 지원하였다.(199~01)

(다) Telefood 행사

방송, 콘서트 등 각종 행사를 통한 연례 모금캠페인인 'Telefood'는 기아인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Telefood' 행사의 모금액은 저소득 국가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의비용으로 이용된다. 1997년 이후 약 1,480개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며 Telefood를 통해 지원을 받은 국가는 120개국 이상에 이른다.

(라) 기술협력프로그램

TCP는 회원국에 긴급한 기술지원 필요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1976년부터 운영되었다. 주로 농림수산업 생산증대, 영세농민의 소득향상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과 연구에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FAO에 산에서 재원이 지원된다. 회원개도국 및 저소득 식량부족국가의 사업에 우선권을 준다. 예산지원 한도는 \$400,000이며, 지원신청 금액이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기간은 3개월 이내의 단기사업에 우선권을 두나 최장 2년까지 허용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긴급사태 대응, 투자촉진, 훈련, 기술자문, 개발계획 수립, 물자지원, 연구개발 등이다. 지원요청은 회원국 정부 및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가 FAO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비정부기구(NGO)도 제출할 수 있다

TCP를 통해 한국이 지원받은 연구자금은 [계주도의 "감귤 저장개선 프로젝트" ('94.11~'96.6)지원금 : 19만 달러] [경북대(권 응정 교수)의 "농촌지역의 시설 재배자를 위한 수정별 개발사업"('99.9~'01.9)지원금 : 19만 8천 달러]이 있다.

(5) FAO와 한국의 관계

- 2004년 <한-FAO간 잠사업발전프로젝트 지원 협정 체결>(10.28) -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지원으로 개도국 지원(2004.1월~2006.12월 3년 기간)

- 2002년 <세계식량정상회의 : 5년후> - 191개국 참석. 세계식량회의(WFS) 목표의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 해결 촉구

- 2001년 <제31차 총회> - 유전자원에 대한 다자간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채택. 2004.6.29일 부터 가입국에 법적 구속력 발효(EU등 61개국 가입. 한국, 미국 등은 현재 미가입상태)

- 1999년 <제29차 총회>(11. 4 ~ 19) - 한국, FAO 이사국 피선(임기 98 ~ 현재까지)

-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11. 13 ~ 17, Rome) - 183개국 참석. '로마선언' 채택. 2015년까지 약 8억 명에 달하는 세계 영양부족인구를 그 절반인 4억 명으로 감축하기로 합의

- 1993년 <제27차 총회>(11. 6 ~ 24) - 사무총장(Jacques Diouf, Senegal) 선출한국, FAO 이사국 피선(임기 95 ~ 97)

- 1991년 <제26차 총회>(11. 9 ~ 27. Rome) - 한국, FAO 이사국 피선(임기 92 ~ 94)

- 1987년 <제24차 총회>(11. 7 ~ 11. 26. Rome) - 한국, FAO 이사국 피선(임기 89 ~ 91)

- 1979년 FAO 내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77그룹의 아시아-그물회의에서 개도국간 경제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자문위 위원국으로 한국 추천

- 1971년 <제16차 총회>(11. 6 ~ 11. 25. Rome) - 한국대표, 총회지명위원회 피선

- 1966년 <FAO 아태지역총회 서을 개최>(9월 14일 ~ 24일, 15개국 참석) - FAO 사무총장 Dr. Sen 방한기아해방운동(FPHC) 제1차 지역회의 서을 개최(식량농업개발정책, 기아해방을 위한 국내위원회 활동문제 논의) 세계식량계획 정부간위원회(WFP/IGC) 한국, 위원국 피선(1967 ~ 68년간)

- 1965년 <제13차 총회> (11. 20 ~ 12. 4. Rome) - 한국, 수산위원회(1970년 설치) 위원국 피선WFP 사무총장 A.H.Boerma 방한(10월 24 ~ 27일)

- 1964년 <FAO 사무총장 Dr. B. R. Sen 방한> (11. 2 ~ 11. 4)

- 1963년 <제12차 총회>(11월) - 한국, FAO 이사국(1965 ~ 67년간) 피선

를 파견, 11월 25일자로 한국의 FAO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나 공일사도
FAO 회원국 가입

- 1945년 <제1차 총회> 1943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청에 의해 개최된
식량농업회의를 모체로 하여, 1945년 10월 캐나다 퀘벡에서 34개국
서명으로 FAO 발족

다. 시사점

FAO는 농업생산성을 높여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전 세계인들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고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1945년에 설립된
UN산하기관으로, 각 회원국간 정책에 대한 정보, 신기술 등 유익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농업·식량문제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주요한 이슈인 만큼, FAO는 그
규모나 예산(연간예산 : 7억달러 이상)이 방대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 세미나는 FAO를 유치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세계 최대의 관광국으로 충분한
국가의 재정과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안에 드는 지원국임에도 불구하고, 3,500명의
FAO 정규 직원 중 한국인(Pyong Jae Lee, Human Resources Officer)이 단 1명밖
에 되지 않고 정부에서 파견한 직원이 4명 정도 파견 근무한다는 사실에 국제기
구에 대한 부족한 정부의 관심에 아쉬움이 남았다.